

한국진보정당의 조직, 이념, 그리고 지지기반*

지병근 | 조선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성장해온 한국진보정당의 조직 및 이념적 지향과 대중적 지지기반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노동당 등을 사례로 진보정당의 당원 및 재정규모, 득표율과 의석수 등의 추이와 이들의 사회주의 지향성, 노동중심성,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한 입장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진보정당에 대한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진보정당은 단기간 내에 당원수와 득표율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념적으로 탈사회주의적·탈계급적 성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 지향성을 나타냈다. 아울러, 친북세력과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보수적 시민들만이 아니라 진보적 시민들의 경우에도 매우 낮았으며,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진보정당에 대한 투표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한국의 진보정당들이 후발주자의 한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지만, 북한체제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다수의 진보적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단순히 북한체제를 옹호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 진보정당, 이념, 조직, 북한,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노동당

* 이 논문은 2013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평가·전망·과제’를 주제로 진보정의연구소와 한국정당학회가 주최한 공동학술회의(2014.2)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I. 서론

지난 2012년 총선 직후 발생한 통합진보당의 내부갈등이 분당으로 이어지고 이석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 이후 비교적 성공적으로 발전해온 진보정당운동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졌다.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모두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각은 차가워졌고, 진보정당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마저 의심받고 있다. 정치적 도약을 위해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진보신당의 명망가들과 유시민을 포함한 국민참여당 인사들이 민주노동당의 이정희와 함께 통합진보당을 창당하자마자 예상치 않게 맞이해야했던 이 위기를 진보정당운동진영이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연구는 한국진보정당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¹⁾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성장해온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을 사례로 한국진보정당의 조직 및 이념적 지향과 이들의 지지기반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그동안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에 관한 연구들이 결코 적지 않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진보정당 내부정파들 사이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조직 및 이념에서 나타난 특성과 역대 선거에서 이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이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각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와 ‘역대선거정보’를 이용하여 진보정당들의 당원 및 재정규모,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의석수 등의 추이분석과 함께 사회주의 지향성, 노동중심성,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한 입장 등 이들이 당헌과 강령을 통해 제시했던 주요한 이념적 지향과 주요 가치의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Korea Democracy

1) 여기에서 진보정당은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창설된 정당을 지칭하며, 한국의 민주화 이후 등장했던 민중당,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청년진보당(사회당), 진보신당(노동당), 진보정의당 등 사회주의적 가치지향성이 비교적 강했던 정당들을 의미한다.

Barometer)의 2010년 여론조사자료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2012년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진보정당에 대한 선호와 투표결정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진보정당을 구성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북한체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진보정당 내부의 정파갈등을 촉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를 억제하는 핵심적 요인이었다고 보고,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진보정당에 대한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진보정당의 당원수가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경우 그 분포가 심각하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둘째, 진보정당은 지난 2004년 총선을 계기로 급성장하였으며, 특히 지역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호남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득표율 상승이 이루어졌다. 셋째, 이념적인 차원에서 여러 진보정당들은 탈사회주의적·탈계급적 성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 지향성을 나타냈다. 넷째, 친북세력과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보수적 시민들만이 아니라 진보적 시민들의 경우에도 매우 낮았으며,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진보정당에 대한 선호와 투표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한국의 진보정당들이 지역주의적 보수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에서 후발주자의 한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새로운 이념적 지향과 조직적·대중적 지지기반을 창출해왔지만 여전히 실현가능한 정책 생산, 진보적 이슈의 개발과 소유권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체제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다수의 진보적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단순히 북한체제를 옹호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개괄하고, 당원수와 당재정 및 역대 선거에서의 득표율, 의석수 등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의 조직적·대중적 지지기반을 분석하고, III장에서는 당헌과 강령을 이용하여 이들의 이념적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IV장에서는 한국 유권자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진보정당에 대한 투표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며, V장에서는 한

국진보정당의 저발전 요인을 크게 지체된 정치세력화, 이념적 불투명성, 이슈소유권의 제한, 한국인의 이념적 보수성과 진보정당의 친북성향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논할 것이다. VI장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논할 것이다.

II. 민주화 이후 진보정당의 역사와 선거참여

1. 민주노동당의 출범과 진보정당의 조직적 기반 확대

한국의 진보정당은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장기간의 노동 억압적인 권위주의체제의 제약을 극복하며 급성장하였다. 1987년 대선에서 백기완선거운동본부의 출범, 1992년 대선에서 민중후보 백기완의 완주, 1997년 대선에서 ‘건설국민승리21’의 권영길 출마 등 선거공간을 이용한 민중운동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시도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총선에 참여하여 비록 최소 원내 1석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민주노총과 전농 등 기층대중조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진보정당으로서 정립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2004년 총선을 통해 국회진입에 성공하였다.²⁾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에 대한 소위 ‘비판적 지지’를 표명했던 민중운동세력의 다수파인 소위 ‘민족해방파(NL)’의 변신이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출범 이후에도 진보정당운동을 외면하다가, 2001년 발표된 소위 ‘9월 테제’를 기점으로 대규모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민주노동당 내부의 정파간 관계가 크게 바뀌었다(부록 1 참조).³⁾ 민족

2) 조현연(2009)은 이시기를 진보정당 운동의 “정치적 실험기”(1988-1996)와 “독자적 정립기”(1997 -2004)로 구분하였다.

3) 이는 2001년 9월 충북 군자산에서 개최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1991-2008)의

해방과는 2004년 김혜경 대표체제가 출범할 당시 사무총장(김창현)과 최고위원직을 차지하면서 당권파로 부상하였으며, 2006년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자주파인 문성현이 결선투표를 통해 평등파인 조승수를 이기고 당선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조현연 2009, 268).

이후 민주 노동당 내부에서 당권파의 패권주의적 당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다가, 일심회사건 관련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을 계기로 평등파가 탈당하여 제18대 총선 직전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2008.3.16).⁴⁾ 하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의 지도부는 민주노동당 및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여, 2011년 12월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였다.⁵⁾ 그러나, 총선 직후 벌어진 당내부정경선을 둘러싼 폭력사태(2012.5.12)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자 이들은 다시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여 국민참여당 및 ‘인천연합’과 함께 2012년 10월 21일 진보정의당을 창당하였다.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며 주목을 받았던 청년진보당은 2001년 사회당으로 변신한 이후에도 각종 선거에 참여하며 진보정당운동을 지속해왔다. 비록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은 ‘반조선노동당’을 기치로 2004년 제17대 총선에 참여하는 등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일종의 금기로 여겨져 왔던 민족해방파의 패권주의와 종북주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지만 민주노동당과의 통합논의과정에서도 이들과의 단절을 제기함으로써 상당한 주목을 받았

‘2001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발표된 소위 ‘군자산의 약속’ 혹은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으로 불리는 것으로, 3년 내에 ‘민족민주정당’ 건설,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 및 연방통일조국’ 건설 등의 정치활동방침을 제시하였다(박종관 2013).

- 4) 최종숙(2009, 170)은 당시 분당의 원인을 ‘종북주의’와 ‘패권문제’로 보았다. 이와 달리 김윤철(2011, 102)은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단순히 정파갈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념 갈등의 심화와 함께 “당권교체의 가능성” 상실, 정파연합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 증가, 명망가의 분당파 형성 등과 같은 연대유인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평등파 역시 분당의 책임이 있으며, 자주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규범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였다(p. 106).
- 5) 이 과정에서 진보신당의 지도부였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는 통합안이 당내에서 부결되자 탈당하여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였다.

다. 하지만, 지속된 실패 속에서 2012년 3월 사회당은 해산하고, 소위 ‘노·심·조’가 탈당한 진보신당과 합당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의 조직적 성장을 당원수의 변화와 지역별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래의 표 1-1은 2008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의 당원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진보신당 탈당과 및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2011년에는 그 수가 13만여 명에 달하였다가 2012년 발생한 분당사태를 계기로 10만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진보신당의 경우에도 2010년 당원수가 2만 5천여 명에 달하였지만 분당으로 인해 그 수가 급감하여 2012년 1만여 명의 당원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표 1-1〉 진보정당의 당원수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통합진보당	70670	67428	114,890	129,898	104,692
진보신당	15,260	16,213	25,819	24,381	11,644
진보정의당	-	-	-	-	6,750
사회당	6,054	5,680	5,759	5,743	-
새누리당	1,794,071	1,952,466	2,090,976	2,225,898	2,474,036
민주통합당	1,643,021	1,647,895	1,918,474	2,072,739	2,132,510
자유선진당	225,134	318,852	491,447	450,430	-
합계	3,877,970	4,123,687	4,790,526	5,101,584	4,781,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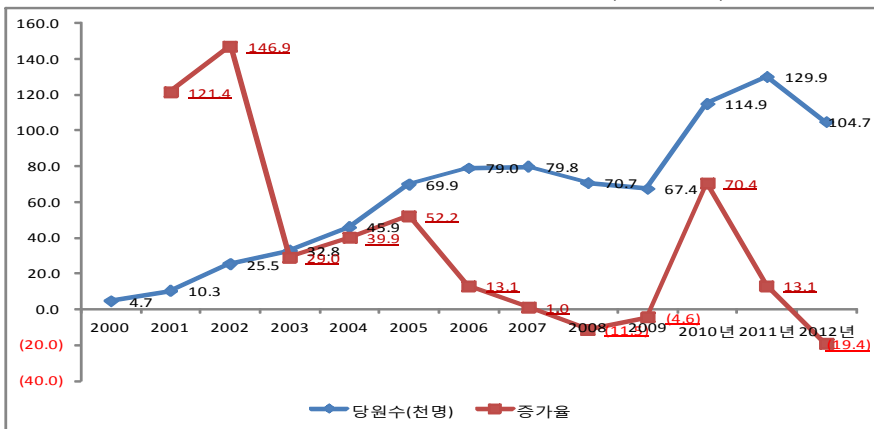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이들의 당원수를 모두 합하더라도 2012년 기준 한나라당의 247만여명, 민주당 213만여명에 비해 불과 5퍼센트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다. 다만, 당비납부율은 새누리당(8.2%), 민주통합당(5.5%)에 비해서 통합진보당(39.6%)과 진보정의당(56.0%), 진보신당(57.5%) 등 진보정당이 훨씬 높다(부록 2 참조).⁶⁾ 따라서, 당비납부 당원수만을 살펴보면 새누리당(202,722명)이나 민주당(117,633명)과 통합진보당(41,444명), 진보정의당(3,783

명), 진보신당연대회의(6,701명) 등 진보정당과의 격차는 크게 감소한다.

둘째, 정당통합을 전후로 나타난 당원 수의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위의 표 1-1에서 잘 나타나듯이 2012년 통합진보당은 정당통합을 수행하기 이전인 2010년 민주노동당보다 오히려 적은 수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정당통합이 성사된 2011년 당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만5천여명 증가하다가, 2012년 분당으로 인해 2만 5천여명이 감소하는 경험을 하였다(그림 1 참조). 진보신당의 경우에도 창당한 이후 점차 당원수가 증가하다가, 2011년 정당통합 논의과정에서 분당사태가 발생하면서 급감하였으며, 2012년 사회당과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불과 1만 1천여명에 머무르고 있다. 2012년 현재 진보신당과 정의당의 당원수를 모두 합하더라도 그 수는 통합이전인 2010년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당원수인 3만 1천여명(=25,819+5,759)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신뢰를 충분히 쌓지 않은 채 진보정당들 사이의 통합과 분열이 이어지면서 상당한 규모의 당원이 이탈하게 된 것이다.

〈그림 1〉 통합진보당의 당원수 및 성장률 추이(2000~2012)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03~2012); 채진원 2009, 271(2000-2002)

- 6) 진보정당의 당비납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진보신당원의 당비납부율이 가장 높으며,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사회당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부록 2).

셋째, 진보정당 당원들의 분포는 지역별로 매우 편중되어있다. 아래의 표 1-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진보정의당의 경우 2012년 현재 서울, 인천, 경기와 전북, 경북 지역에만, 진보신당 역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에만 당원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진보정당의 지역적 기반은 매우 편중되어있다. 특히 진보신당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41.2%의 당원이, 진보정의당의 경우는 인천, 전북, 경북에 20퍼센트 내외의 당원이 편중되어있다. 양당 모두 대구,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제주에는 단 한명의 당원도 등록되어있지 않다.

〈표 1-2〉 진보정당 당원의 지역별 분포(2012년)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총당원수	104692	(100.0)	11644	(100.0)	6750	(100.0)
서울특별시	16553	(15.8)	4801	(41.2)	1329	(19.7)
부산광역시	6038	(5.8)	1112	(9.5)	0	(0.0)
대구광역시	2504	(2.4)	0	(0.0)	0	(0.0)
인천광역시	2994	(2.9)	1073	(9.2)	1165	(17.3)
광주광역시	8193	(7.8)	0	(0.0)	0	(0.0)
대전광역시	3192	(3.0)	0	(0.0)	0	(0.0)
울산광역시	5739	(5.5)	1118	(9.6)	0	(0.0)
경기도	22792	(21.8)	2334	(20.0)	1629	(24.1)
강원도	2165	(2.1)	0	(0.0)	0	(0.0)
충청북도	2399	(2.3)	0	(0.0)	0	(0.0)
충청남도	3212	(3.1)	0	(0.0)	0	(0.0)
전라북도	6854	(6.5)	0	(0.0)	1417	(21.0)
전라남도	7373	(7.0)	0	(0.0)	0	(0.0)
경상북도	3675	(3.5)	0	(0.0)	1210	(17.9)
경상남도	8774	(8.4)	1206	(10.4)	0	(0.0)
제주특별자치도	2235	(2.1)	0	(0.0)	0	(0.0)
세종특별자치시	0	(0.0)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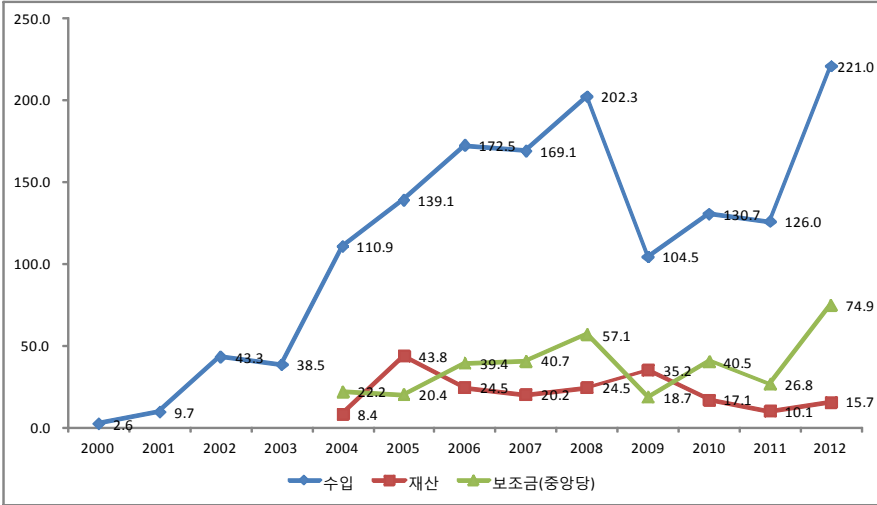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3), 2012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진보정당의 재정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아래의 그림 2는 2004년과 2012년 사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재산, 국고보조금, 중앙당 수입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잘 나타나듯이, 통합진보당의 경우 2004년 민주노동당 시절 재산은 8.4억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15.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 또한 2004년 22.2억 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74.9억 원으로 세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앙당의 수입은 2000년 불과 2억여 원이었지만 국회에 진출한 2004년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221억 원에 이르렀다.

진보정당의 운영은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에서 잘 나타나듯이 최소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 비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의 경우 공천과정에서 당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후보공천과정이 정착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여전히 당내 분파의 비공식적인 채널에 의한 당조직 운영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내부의 실질적인 운영이 과거의 정치적 연분에 기초한 계파정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⁷⁾ 아울러, 기층당조직으로 갈수록 일부 열성당원들에 의한 가부장적 정당운영이 일반화되어 있다. 공직선출과정에서 당원에 의한 경선이 대부분 복수후보 사이의 경선이 아닌 단수후보를 승인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지병근 2010).

7) 최종숙(2009, 169)은 제17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당내민주주의가 “다수결 중심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하는 참여모델”에 가까우며, “인터넷 공론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당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수동적인 심의적 참여모델”이라고 주장하였다. 통합진보당 내부의 ‘당권파’, ‘민족해방그룹’, ‘평등연대’, ‘다함께’ 등 민주노동당의 당내분파에 대해서는 김진수(2004)를 참조할 것.

〈그림 2〉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재산, 국고보조금, 중앙당수입(2000-2012, 억원)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2. 민주화 이후 진보정당의 선거참여

진보정당의 성장은 이들이 선거에서 거둔 성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1에서 잘 나타나듯이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정당후보의 득표율은 매우 미미하였다. 1997년 ‘국민승리21’의 후보였던 권영길은 불과 1.19퍼센트를 득표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1992년 무소속 민중후보로 나선 백기완의 1.0퍼센트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⁸⁾ 권영길은 2002년과 2007년에도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하여 각각 3.89퍼센트와 3.01퍼센트를 얻는 데 그쳤다.⁹⁾

8) 조현연(2009)에 따르면 국민승리 21은 민주노총, 진보정치연합,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1997년 대선에서 ‘국민후보’를 추대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p. 157); 이들 외에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정치연대’ 또한 선거가 임박한 동년 10월 공동선거대책본부인 ‘민중과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에 참여하였다(p. 162); 하지만 이들은 ‘국민후보’ 운동이 탈계급적이라고 보아 사실상 선거운동에 소극적이었다(p. 166).

9) 조현연(2009)은 제17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였던 정동영의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었기에 사표심리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은 민주노총 국민파

〈표 2-1〉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정당후보의 득표율

대통령선거	1987년 13대	1992년 14대	1997년 15대	2002년 16대	2007년 17대
	무소속	무소속	건설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후보자	백기완	백기완	권영길	권영길	권영길
득표수	중도사퇴	238,648	306,026	957,148	712,121
득표율전국		1.00	1.19	3.89	3.01
서울특별시		28.4	21.5	18.8	16.3
부산광역시		9.1	8.4	6.4	6.9
대구광역시		5.4	5.3	4.4	3.6
인천광역시		5.2	6.6	6.4	5.9
광주광역시		0.7	0.5	0.8	1.9
대전광역시		2.4	2.8	3.1	2.4
울산광역시		-	10.5	6.0	6.1
경기도		15.2	15.6	21.9	20.3
강원도		4.0	2.7	4.0	4.0
충청북도		3.6	3.3	4.4	3.6
충청남도		4.3	3.1	5.2	4.5
전라북도		1.8	1.4	1.6	2.5
전라남도		1.4	0.7	1.3	3.3
경상북도		7.4	7.3	6.5	5.5
경상남도		9.6	9.1	8.3	11.6
제주(특별자치)도		1.5	1.3	0.9	1.5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대선에서와 달리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정당, 특히 민주노동당의 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아래의 표 2-2에서 잘 나타나듯이 민주노동당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권영길, 창원시 을; 조승수, 울산 북구)과 13퍼센트의 지지로 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여 국회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1992년

와 연합한 자주파가 2006년 문성현 당대표 체제를 선출한 이후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노선과 세계관을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p. 254), 권영길을 또다시 후보로 선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p. 257).

민중당이 52명의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키는데 뒤이어, 2000년 총선에서도 민주노동당이 21명, 청년진보당이 무려 46명의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후보도 당선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당내갈등과 진보신당의 창당 여파로 지역구 2석(권영길, 창원시 을; 강기갑, 사천시)과 비례대표 3석(곽정숙, 홍희덕, 이정희)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며, 진보신당은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지역구에서만 7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비례대표선거에서도 2008년 제18대 총선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득표율 상승으로 6개 의석을 차지하였다.¹⁰⁾

〈표 2-2〉 역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후보자 및 당선자 수

후보 및 당선자	1988년 13대	1992년 14대	2000년 16대	2004년 17대	2008년 18대	2012년 19대					
	민중의 당	민중당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사회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지역구 후보자)	16	52	21	46	123	6	103	34	0	51	23
지역구	0	0	0	0	2	0	2	0	0	7	0
비례대표	-	-	-	-	8	0	3	0	0	6	0
합계	0	0	0	0	10	0	5	0	0	13	0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아래의 표 2-3은 역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17대~19대)에서 진보정당의 당선자 수, 득표수, 득표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표에서 잘 나타나듯이, 처음으로

10) 2012년 총선 직후 발생한 내분으로 현직 의원으로는 통합진보당의 경우 김미희(경기 성남시 중원구), 김선동(전남 순천시 곡성군), 오병윤(광주 서구 을), 이상규(서울 관악구 을) 등 지역구 의원 4인과 김재연, 이석기 등 2인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정의당의 현직 의원으로는 1명의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경기도 양시 덕양구 갑)과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등 4인의 비례대표의원이 있다. 정의당 의원이었던 노회찬(서울 노원병)은 삼성X파일공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강동원(전북 남원시순창군)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남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개최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은 가장 높은 득표율(13.2%=13.0+0.2)을 얻었다. 거의 3백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투표한 것이다. 반면,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절반 가까이 지지율이 하락하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사회당은 8.8%(=5.7+2.9+0.2)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이는 무엇보다 2005년 이후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내부갈등의 여파로 진보신당이 분당하여 선거에 임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김윤철 2011, 116-119). 그러나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은 11.4%(=10.3+1.1)로 다시 상승하였다. 반면, 진보신당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2.9%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제19대 총선에서는 불과 1.1%만을 얻는데 그쳤다. 이는 진보신당을 대표하던 노·심·조가 탈당하여 통합진보당에 합류하면서, 당세가 급속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3〉 역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정당의 당선자 수, 득표수, 득표율

	2004년 17대		2008년 18대			2012년 19대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사회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당선자 수	8	0	3	0	0	6	0
득표수	2,774,061	47,311	973,445	504,466	35,496	2,198,405	243,065
총유효투표수	21,285,984		17,131,537			21,332,061	
득표율전국	13.0	0.2	5.7	2.9	0.2	10.3	1.1
서울특별시	12.6	0.1	3.8	4.0	0.1	10.6	1.5
부산광역시	12.0	0.2	5.3	2.8	0.1	8.4	0.9
대구광역시	11.6	0.2	3.2	2.3	0.1	7.0	0.9
인천광역시	15.3	0.2	5.8	3.2	0.1	9.7	1.2
광주광역시	13.1	0.1	9.4	2.6	0.2	18.6	1.1
대전광역시	11.8	0.2	3.9	2.0	0.1	9.0	0.9
울산광역시	21.9	0.3	14.2	4.5	0.1	16.3	2.0
경기도	13.5	0.1	4.8	3.3	0.1	11.0	1.0
강원도	12.8	0.4	5.9	2.3	0.3	6.6	0.7
충청북도	13.1	0.3	5.7	2.0	0.3	7.7	1.0

	2004년 17대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충청남도	10.5	0.3	4.7	1.7	0.3	6.8	0.7
전라북도	11.1	0.3	7.4	2.4	0.5	14.2	1.5
전라남도	11.2	0.4	10.1	1.6	0.7	14.8	0.7
경상북도	12.0	0.6	4.1	1.8	0.4	6.2	0.6
경상남도	15.8	0.4	10.6	3.0	0.3	10.5	1.5
제주(특별자치)도	14.1	0.4	10.0	2.3	0.4	12.4	1.5
세종특별자치시						5.4	0.6

굵은 글씨는 가장 높은 득표율, 이탤릭체는 호남지역 득표율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제17대 총선에서는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최근의 총선에서 점차 감소한 반면, 호남의 경우에는 점차 상승하여, 제19대 총선에서는 광주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인 19.7퍼센트(=18.6+1.1)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이처럼 호남에서 통합진보당의 득표율 상승은 진보적 유권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지역정당에 대한 애정만이 아니라 이념에 기초한 투표성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진보정당의 이념과 조직: 사회주의적, 계급적 성격의 탈피, 그리고 원내정당화?

아래의 표 3은 진보정당이 당헌과 강령을 통해 공표한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 계급성, 정당의 기능, 대북·대미 정책과 관련한 주요 입장들을 요약한 것이다 (부록 3, 4 참조).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 지향은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경우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노동당만이 사회주의 지향성을 밝히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당헌전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

일, 민주와 민생,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고 밝혔으며, 정의당은 강령전문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역시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주의 이외의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¹¹⁾

〈표 3〉 진보정당의 주요 당헌/ 강령(발취)

	통합진보당(당헌/강령)	정의당(당헌/강령)	노동당(강령)
가치 지향	진보적 민주주의 가치 아래 자유와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생,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	진보정치와 미래를 여는 혁신적 진보정당; 현대적이며 민주적인 진보대표정당 <i>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i>	<i>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를 추구(국가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부정); 평등 생태 평화의 새로운 공화국/</i>
계급성	노동자·농민·어민·도시빈민·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	조직된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노동계층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기업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
정당의 성격	정책정당, 대중정당, 생활정당, 투쟁하는 정당	노동기반 대중정당, 시민참여 진보정당, 현대적 생활정당	대중정당, 운동정당, 생활정당/

11) 통합진보당의 경우 창당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및 진보신당의 가치지향을 당헌전문에 종합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진보대표정당”을 자임하는 정의당의 경우 선거정당의 성격이 비교적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지양과 관련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합진보당(당헌/강령)	정의당(당헌/강령)	노동당(강령)
통일	자주적 평화통일/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	평화 공화국을 건설/ 남북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남한과 북한 의 양 체제를 모두 지 양하는 진보적 통일/
비핵· 평화체제	한반도·동북아의 비핵· 평화체제를 조기구축	평화체제를 실현/조기 에 한반도 비핵·평화체 제달성	평화체제 수립/
평화협정	체결	체결	-
탈강대국 외교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의 개정 폐기, 강 대국중심의 국제질서 를 극복	강대국 중심 체제를 극복/ 모든 불평등 조 약과 협정을 개정·폐 기, 강대국 중심의 국 제질서를 극복	강대국중심 국제질서 를 극복
해외파병	해외파병금지	-	-
한미동맹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해체, 동북아 다자평화 협력체제로 전환	종속적 한미동맹을 탈 냉전적 관계로 재편	-
주한미군	철수	단계적 철수	-
남북협약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의 존중과 6·15 공동선 언 및 10·4 선언의 이 행	6.15선언·10.4선언 이 행 등 통일을 위한 상 호 협력과 비핵화	-
군축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 북 상호 군비축소	상호군축	-
비핵· 평화체제	한반도·동북아의 비핵· 평화체제를 조기에 구 축	조기에 한반도 비핵·평 화체제를 달성	모든 핵발전과 핵무기 철폐

바탕제는 당헌, 이탤릭체는 강령에 포함된 구절; /의 앞은 강령전문 구절
 자료 출처: 각 정당의 당헌 및 강령

둘째, 각 진보정당의 당헌과 강령에는 노동계급 중심성에 대한 언급이 지극히

제한 혹은 자제되어 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모두 노동자 중심성을 언급하지 않고 다양한 계급계층을 대표하는 “대중정당”이자 “생활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다. 오히려, 통합진보당은 “국민이 주인되는” 진보적 민주주의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적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당은 이주노동자, 성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탈노동중심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의 진보정당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방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당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²⁾ 이러한 경향성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이들이 생산관계에 초점을 두고 생산적 노동자와 같은 특정한 계급의 해방에 정당의 지향을 설정하는 경제결정론적 접근법에서 탈피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더 나아가, 이들의 지향이 생산관계에 기초한 계급해방만이 아니라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등과 같이 다양한 차원의 사회경제적·문화적·정치적 예측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계급 중심성을 강조함으로써 해방의 주체를 한정하기보다는 다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통일과 핵개발과 관련한 대북정책과 관련한 진보정당의 태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당헌 전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하위 가치들을 제시하며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반면, 정의당과 사회당은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하지만, 당강령 전문에서 정의당은 “적극적 평화·공영의 노력으로 평화체제를 실현하고, 통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당 역시, 평화체제의 수립과 비핵지대화 등을 통해 “분단에 따른 일상적 전쟁 위험을 넘어 평화 공화국을 건설”

12) 민주노동당은 2011년 6월 당강령을 개정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강령내용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하였다.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는 “노동 존중”으로 대체하였으며,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노동배제적 경영방식 종식”은 삭제하였다(김희경 2013.11.07). 이러한 진보정당의 변화는 단순히 합법적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형식적인 변화라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가치를 재구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정의당의 경우에는, 7개 부문의 약속들 가운데 6번째 항목인 “평화·통일의 한반도, 평화·공영의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6.15선언·10.4선언 이행 등 통일을 위한 상호 협력과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상호군축,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와 “종속적 한미동맹”의 재편,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6-1). 아울러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할 것과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극복, 그리고 “평화·공영의 동아시아공동체” 건설 등을 제기하였다(6-2). 이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의 정책적 차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노동당은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강령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한다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서는 다른 진보정당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⁴⁾ 하지만, 노동당의 대북정책은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의 진보적인 체제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과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노동당은 “분단은 한반도를 항구적 전쟁 위험에 빠뜨리며 자본주의에 맞설 대안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하며, 통합진보당이 내세우는 “자주적 통일” 대신에 “남북한 민중의 삶”을 개선할 것과, “남한과 북한의 양 체제를 모두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추구한다(3조)고 밝히고 있다.

13) 강령에 포함된 구체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도 6개 부문의 강령들(총 47개 세부항) 가운데 마지막 부문인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의 통일 체제를 향해”에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종속적 한미동맹체 해체, 해외파병금지, 군비동결과 축소(이상 4항),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의 존중과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이행”(이상 4항),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의 개정·폐기”(이상 4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14) 노동당의 경우 강령에 포함된 총 19개 항목들 가운데 2개 항목에서 통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통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3조), “미국 등 강대국 중심 국제 질서를 극복”하고, “녹색평화외교”를 통해 “평화협력의 국제 연대”를 실현할 것(4조)을 주장하였다. 노동당의 전신인 사회당의 경우에는 총 6개항 가운데 [평화 강령]·비핵·평화 체제의 수립과 평화 국가로의 전환 항목에서 “비핵·평화 체제”의 수립과 동북아시아 지역에 “다자간 안전보장 체제”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노동당 강령/당헌/당규, 부속문서 2. 사회당 강령).

넷째, 진보정당의 조직적 특성과 관련하여 최근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 원단의 독립성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채진원(2009)은 민주노동당의 당원수가 양적으로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증가율은 물론 당비납부자의 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중앙당 총수입 대비 당비의 비율, 당원 대비 민주노총 조합원 비율이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진성당원제에 기초한 대중정당모델을 따르는 민주노동당이 약화되고 원내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p. 271). 아울러, 그는 당내에 사회민주주의적 정파가 등장하고 2007년을 전후로 나타난 정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당개혁 시도, 공직·당직 겸직금지제도 폐지, 의원들의 보좌관 임면권 확보와 독자 입법발의권 확보, 의원단총회의 대표성 강화, 제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후보에 대한 “개방형 전략 공천제” 도입 등을 원내정당화의 근거로 제시하였다.¹⁵⁾ 물론, 그의 주장처럼 통합진보당이 원내정당화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소속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정당의 ‘파견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르기보다는 대중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토대로 당내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경향성을 부정하기도 힘들다.

IV. 한국의 진보적 유권자와 진보정당에 대한 투표결정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인의 투표행태는 지역주의에 의해 지배

15) 그 외에도 채진원(2010)은 “원내의원들의 비대위 대표 겸직 및 영향력 증가”와 “원내대표의 당대표화, 원내부대표의 당 정책위 의장화” 등을 원내정당화의 근거로 제기한다. 더 나아가 그는 산업화시대에 부합하여 작동하던 대중정당모델에 기초하여 출발한 민주노동당이 노동유연성이 증가하는 “시대전환적인 사회구조변동”으로 인해 원내정당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윤철(2011, 107-108)은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며, 민주노동당은 이념적 통일성이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자주와 평등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공통의 이념 창출에 실패했다”고 보아야 하며, 정파는 약화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도 당권과 대권경쟁 과정에서 이에 의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후보자와의 이념적 거리 및 방향성이 대선 및 총선에서 이들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왔다(최준영·조진만 2005; Jhee 2006; 이갑윤·이현우 2008; 이내영 2009; 강원택 2010; 박원호 2012; 강원택 2013).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민노당에 대한 이념적 혹은 계급적 투표 성향에도 주목하였으며(안순철·가상준 2006; 강원택 2010), 예를 들어, 강원택(2010)은 2004년 민노당의 성공적인 국회진입이 단순히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민노당의 “이념적 특성에 공감”하였기 때문인지를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의 총선에서 민노당은 40대와 30대, 남성, 노동자(블루/화이트칼러), 대도시 지역의 유권자들만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고학력 유권자(고졸 이상), 고소득층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아울러, 민노당 지지자들의 이념적 특성이 열린우리당 지지자들과 매우 유사하지만, 민노당이 진보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이에 투표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응답자와 민노당 사이의 이념적 거리가 투표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노당에 대한 투표는 이념투표라기 보다는 단지 “‘신생정당’으로서의 참신성과 ‘때 묻지 않음’, ‘원칙성’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일 것”이며, 열린우리당처럼 “기존에 지지하던...정당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제3당을 일시적으로 선택하는” 저항투표(protest voting)라고 주장하였다(p. 166).¹⁷⁾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인의 이념을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 대한 태도가 진보정당에 대한 투표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¹⁸⁾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전쟁 이후

16) 집합적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김형철·박용수(2010) 참조.

1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안순철·가상준(2006)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은 기존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거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호가 강한 이들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진보적 유권자들의 증가와 이들의 지지로 인해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총선 이후 보수적 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정책개발을 통해 정당일체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p. 54).

18) 여기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를 통치하는 집권세력에

반공주의가 한국인의 인식을 지배해왔으며, 북한에 대한 태도는 정치세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진보정당 내부 정파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통합진보당의 내분과 정의당의 분당 과정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파들의 태도, 특히 민족해방파의 친북적인 태도가 결정적인 내부갈등요인으로 작용했던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¹⁹⁾

지병근(Jhee 2011)은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인들이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밝혔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친북세력의 집회(62.1%), 선거참여(4.1%), 공직수임(63.4%), 단체결성(63.4%)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매우)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과 10퍼센트 정도의 유권자들만이 친북세력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하여 일관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진보적인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한 비율(37.5%)이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과 함께 북한정치체제의 민주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관용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이는 진보적 유권자들이라고 해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지 않으며, 북한의 체제유지가 아니라 민주적 체제전환이 이들의 반복의식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부록 5 참조).

아래의 표 4-1은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친북세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진보정당에 대한 선호에 미친 영향을 로지스틱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진보정당(민주노동당 혹은 진보신당)에 대한 선호여부이다.²⁰⁾ 독립변수로는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관용(0~4: 0=비관용, 4=관용), 북한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1~10: 1=완전 독재, 10=완전

대한 다차원적 태도를 의미한다.

19) 최중숙(2009, 193)은 “민주노동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참여모형을 기본으로 하는 의결기구를 비공식적 공론장으로 보완하고 있는 심의적 참여모형”이었지만, “심의적 참여모형은 당내 정파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를 형성해 온 북한문제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시도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당지도부가 관망하였기에 분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20) 이 조사에는 응답자의 76.4퍼센트가 선호하는 정당을 밝혔으며, 이들 가운데 10.0퍼센트의 응답자(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7.7%)가 진보정당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민주주의), 이념적 보수성(1~10: 1=진보, 10=보수), 연령집단(1~5: 1=20대 미만, 5=60대 이상),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1~5: 1=매우 나쁘다, 5=매우 좋다), 노조가입(=1) 등이 포함되었다.²¹⁾ 통제변수로는 소득(1~5: 1=200만원 미만, 2=300만원 미만, 3=400만원 미만, 4=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교육수준(대재 이상=1), 남성(=1), 거주지역(영남, 호남) 등이 포함되었다.

21) 남한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세력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추종하는 친북세력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여기서는 지병근(Jhee 2011)을 따라 응답자들이 친북세력의 집회, 선거참여, 공직수임, 단체결성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각각 반대하는지 여부를 묻는 응답(반대=1, 찬성=0)을 단순 합산하였다.

〈표 4-1〉 진보정당(민주노동당 혹은 진보신당)에 대한 선호결정 요인

변수	모델 1	모델 2
정치적 관용 (친북세력)	0.15** (0.07)	
북한의 민주주의		0.09 (0.11)
이념적 보수성	-0.23*** (0.07)	-0.22*** (0.07)
연령집단(1~5)	-0.40*** (0.12)	-0.41*** (0.12)
정치적 만족감	-0.50*** (0.19)	-0.52*** (0.19)
노조 가입	0.07 (0.42)	0.04 (0.42)
소득	0.02 (0.11)	0.02 (0.11)
교육수준(대재 이상)	0.11 (0.32)	0.19 (0.32)
남성	-0.12 (0.26)	-0.13 (0.26)
호남	0.75** (0.36)	0.88** (0.36)
영남	0.35 (0.30)	0.32 (0.31)
상수	0.53 (0.89)	0.67 (0.89)
사례수	728	716

괄호안의 수는 표준오차; ** 유의도 0.05, *** 유의도 .01
 자료출처: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2010)

이 표의 모델 1에서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관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진보정당에 대한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포함하는 진보정당

을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념적인 보수성, 연령,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만족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이명박 정부 집권시기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클수록 진보정당을 선호할 가능성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입, 소득, 교육수준, 성별, 영남 등은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 가운데에는 호남만이 진보정당에 대한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의 모델 2에서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예상과 달리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의 효과는 모델 1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²²⁾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선호가 유권자의 계급적 특성이나 경제적 지위보다 이념적 성향과 북한에 대한 태도의 함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지극히 낮은 한국에서 이처럼 진보정당이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관용이 높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 결국 다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²³⁾ 아울러 노동조합 가입이 진보정당에 대한 선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창출하는 것이 상당한 한계에 봉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남거주자일수록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경향은 이미 앞서(표 2-3) 밝힌 것처럼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과거와 달리 영남지역보다 호남지역에서 더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 4-2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시기에 시행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이념적 성향(0~10: 0 매우 진보, 10=

22) 민주노동당을 선호한 경우만을 종속변수로 분석할 경우 어떠한 독립변수도 이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물론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관용이 커질 경우에도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는 증가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민주화 직후인 1988년부터 민족해방파는 ‘북한바로알기운동’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주의적 통일지향성을 고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매우 보수)에 따른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는 “통일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인지, “무력도발 가능성”, 그리고 북한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갈망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였다.

〈표 4-2〉 북한에 대한 인식

	이념성향	부정적	긍정적	전체
대화/타협 가능성 (없다-있다)	진보(0~4)	414	205	619
		66.9	33.1	100.0
	중도(5)	612	202	814
		75.2	24.8	100.0
Pearson chi2(2) =32.51, Pr=0.000	보수(6~10)	494	116	610
		81.0	19.0	100.0
	전체	1,520	523	2,043
		74.4	25.6	100.0
무력도발 가능성 (없다-있다)	진보(0~4)	214	404	618
		34.6	65.4	100.0
	중도(5)	293	522	815
		36.0	64.1	100.0
Pearson chi2(2) =8.06, Pr=0.018	보수(6~10)	177	433	610
		29.0	71.0	100.0
	전체	684	1,359	2,043
		33.5	66.5	100.0
통일에 대한 갈망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진보(0~4)	483	135	618
		78.2	21.8	100.0
	중도(5)	661	150	811
		81.5	18.5	100.0
Pearson chi2(2) =4.04, Pr=0.133	보수(6~10)	501	107	608
		82.4	17.6	100.0
	전체	1,645	392	2,037
		80.8	19.2	100.0

자료출처: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2012)

이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수적인 이들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이들 가운데 과반 수 이상이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무려 66.9%가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으며, 무려 65.4%가 무력도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진보적인 응답자들 가운데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또한 무려 78.2%에 달하였다.

아래의 표 4-3은 2012년 총선(비례대표)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투표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투표여부이다. 독립변수로는 북한에 대한 평가, 즉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정도(1~4: 1=전혀 불가, 4=매우 가능),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1~4: 1=전혀 불가, 4=매우 가능), 북한정권의 통일 갈망도(1~4: 1=전혀 불원, 4=매우 갈망) 등이 포함되었으며, 그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1~4: 1=매우 잘못함, 4=매우 잘함)이 포함되었다. 통제변수로는 소득(1~5: 1=200만원 미만, 2=300만원 미만, 3=400만원 미만, 4=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학력(전문대 이상=1, 나머지=0), 남성(=1), 연령집단(1~5: 1=20대 미만, 5=60대 이상), 이념적 보수성(0~10: 0=진보, 10=보수), 거주지역변수(영남, 호남) 등이 포함되었다.

〈표 4-3〉 제19대 총선에서 진보정당(통합진보당)에 대한 투표결정요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대화/타협	0.40*** (0.15)		
무력도발		-0.22 (0.15)	
통일지향			0.26 (0.15)
국정운영	-0.95*** (0.18)	-0.92*** (0.18)	-0.93*** (0.18)
소득	0.16 (0.09)	0.14 (0.09)	0.15 (0.09)

	모델 1	모델 2	모델 3
학력(전문대 이상)	0.41 (0.28)	0.45 (0.27)	0.44 (0.27)
남성	0.24 (0.23)	0.25 (0.23)	0.28 (0.23)
연령	-0.22** (0.11)	-0.23** (0.11)	-0.22** (0.10)
이념적 보수성	-0.24*** (0.06)	-0.25*** (0.06)	-0.24*** (0.06)
호남	0.64** (0.30)	0.73** (0.30)	0.68** (0.30)
영남	-0.03 (0.29)	-0.16 (0.28)	-0.09 (0.28)
상수	-0.94 (0.70)	0.62 (0.76)	-0.59 (0.69)
사례수	1,410	1,410	1,405

괄호안의 수는 표준오차; ** 유의도 0.05, *** 유의도 .01
 자료출처: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2012)

이 표의 모델 1에서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통합진보당에 대한 투표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통합진보당에 대한 투표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통제변수들 가운데 연령과 이념적 보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거주여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투표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통합진보당에 대한 투표가능성은 감소하는 반면, 호남에 거주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른 변수들 가운데 소득, 학력, 남성, 영남 등은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의 모델 2와 모델 3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통일에 대한 갈망도는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영향은 모델 1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V. 추가 논의: 진보정당의 한계와 과제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진보정당은 조직적인 급성장과 상당수의 의석 수 확보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진보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의 수는 보수정당의 5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선거과정에서 진보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득표율 또한 10퍼센트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진보정당 사이의 신뢰와 연대의 기풍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채 분당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보정당 결성의 지체와 민주당에 의한 진보적 유권자의 선점

한국의 진보정당이 여전히 시민들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단순다수제 위주의 선거제도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에 대한 투표가 사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선가능성이 있는 차선의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안순철 1996; 진영재 1998; 경제희·김재한 1999; 최정욱 2006; 지병근 2008).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이유가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의 제한성을 모두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지후보의 당선가능성 이외에도 정당일체감이나, 이념적 성향, 소속된 사회집단, 이슈에 대한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진보정당의 결성이 지체되고 원내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진보적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에 의한 진보적 유권자 선점과 지역주의에 의존한 보수정당체제의 확립으로 이어졌다. 민주화 이후 민중운동진영의 다수파는 진보정당 운동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소위 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 머물렀었으며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국 이들의

바람대로 1997년 국민의 정부가 등장하며, 야당에 의한 권력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의한 보수정당체제가 고착화되었다.

2. 이념적 불투명성, 폐쇄성, 그리고 구체성 결여

20세기 말에 도래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는 진보진영의 이념적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다수의 진보진영이 추구하던 사회주의적 대안의 정당성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개혁과 개방을 포함하여 체제변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사회주의 체제는 ‘진보의 재구성’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진보의 가치와 현실개혁의 대안을 투명하게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최소한 한국의 진보진영에게 구사회주의체제의 오류를 이해하고 이를 답습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진영은 현실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와 같은 이념적 경직성을 버리고 개방적으로 다양한 이념사조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제시하는 사회개혁의 구상은 여전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 높은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선거과정에서 진보정당의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에서도 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복지공약의 재원마련을 위한 이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유권자들이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3. 이슈 소유권의 부재

진보정당은 선거경쟁과정에서 주요이슈에 대한 소유권(issue ownership)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빈곤을 경험한 한국의 유

권자들 사이에는 안보와 경제발전과 같은 비진보적 이슈의 우선성(issue priority)이 장기간 유지되어왔으며, 이 이슈들에 대한 소유권을 선점한 보수정당들은 선거경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왔다.²⁴⁾ 민주주의와 자유 및 인권과 관련한 이슈들 가운데 대부분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한 이슈는 진보진영이 우선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슈들은 1997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한국의 선거정치에서 여전히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⁵⁾ 더구나 이 이슈들에 대한 소유권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 의해 분점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거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박찬욱 2013).

국민들의 기대만큼 구체적 이슈의 개발과 소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는 철회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2002년 대선 이후 한국시민들의 보수화가 가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이들이 지역주의적 보수정당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통로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실제 없는 안철수 신당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던 현상은 이러한 기대가 진보정당으로부터 제3정당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보수화되어가는 유권자들로부터 진보적 사회개혁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24)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동아시아연구원의 총선/대선 패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국가안보의 강화와 경제성장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응답한 이들은 각각 78.4%와 60.8%에 달하였으며(문재인후보라고 응답한 이들은 각각 13.5%, 26.5%), 문재인 후보가 정치개혁과 경제양극화의 완화를 가장 잘 해결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각각 57.3%와 50.4%에 달하였다(박근혜 후보라고 응답한 이들은 각각 25.0%와 29.5%). 이에 관한 논의는 지병근(2013b, 196)을 참조할 것.

25)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조사자료를 분석한 지병근(2013a, 43)에 따르면, 불평등 완화(빈부격차 감소)가 정치적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무려 81.3퍼센트에 달하였다.

는 무엇보다 다양한 진보적 이슈의 창출과 함께 관련된 정치정보와 이에 대한 진보적 해석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는다면, 진보적 지향을 포기한 채 유권자의 지지를 구걸하는 소위 ‘대중추수주의’ 혹은 진보운동의 ‘계토화’만 초래할 수 있다. 진보정당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소유하고 있는 안보와 경제발전, 그리고 자유주의적 이슈의 소유권을 둘러싼 경쟁과 복지확대 등 진보적 이슈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반공보수주의와 한국사회의 비관용(intolerance) 그리고 진보진영의 친북성향

진보정당의 성장이 지체된 또 다른 원인은 한국인들의 이념적 보수성과 진보 세력에 대한 낮은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극우 반공보수세력들은 종종 이를 악용하여 진보정당이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직접 연계되어 있거나 최소한 추종하고 있다는 이념적 조작을 통해 진보정당을 위협해 왔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은 사회적 개혁을 모색하는 세력이라는 인식보다는 현존하는 질서를 위협하는 폭력적 반체제 세력이라는 인식이 널리 재생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8월말 발생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역시 진보진영의 호전성과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오해를 강화시키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진보정당, 특히 민족해방파가 주도했던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와 세습체제를 비롯한 북한체제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또한 이러한 위협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도록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은 미국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적인 비판을 수행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주의 혹은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다시 말해, 이들은 북한의 인권문제 및 민주화 이슈는 배제한 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화해의 차원에서만 북한이슈를 접근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통일지향성이 ‘중북’으로 왜곡·과장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친북적 태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의 대응이 오히려 극우반

공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²⁶⁾

민족해방과 이외의 진보진영 또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사회당을 비롯한 일부의 진보세력들이 북한체제와 북한노동당을 옹호하는 행위가 사회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한국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탄압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러한 시도는 진보진영 내부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복의식을 조장하는 반통일세력의 분열주의적 이적행위로 폄하되었다. 진보진영의 대부분은 북한체제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해온 소위 ‘주사파’에 대한 비판이 자칫 ‘극우세력에 의한 반공주의적 여론몰이와 이념조작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감내하기보다는 이를 회피하고 정파간 세력경쟁에 몰두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⁷⁾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의 창당 및 분당과정에서도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1987년 이후 성장해온 한국진보정당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조직 및 이념적 특성과 대중적 지지 기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

26) 이석기 사건 또한 모든 시민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정치적 탄압이며, 반공보수세력에 의한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은 진보진영으로부터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그를 포함하여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신념과 사상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또한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7) 사회당의 ‘반북노동당’ 운동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이와 같은 진보진영 내부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비판이 정파경쟁의 맥락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사회당이 진보진영 내부의 ‘종북세력’보다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논쟁을 진행되었다면, 더 많은 호응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영태(2008)는 진보신당이 북한에 대하여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반공주의에 몰릴 수 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민주노동당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성이 희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 48).

구는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여러 진보정당들의 당원수가 급증하고 재정적 기반도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10퍼센트 내외의 정당지지율과 10여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한국진보정당의 당원수는 2012년 현재 10만여 명에 불과하며 통합진보당을 제외하면 지역적으로도 매우 편중된 조직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가치지향을 수용함으로써 이념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목할만한 ‘진보의 재구성’은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한 탈사회주의·탈노동중심적 경향성만이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특정정파에 의한 정당운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체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호적인 민족해방파의 태도는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와 한국정치연구소의 여론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보정당은 저소득층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기보다는 연령이 적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최근 한국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가 계급적 투표라기보다는 이념적 투표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한국의 유권자들은 친북세력 혹은 북한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며,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 또한 예외는 아니다. 통합진보당은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낮고, 북한체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진보진영이 북한체제를 옹호할 경우 보수적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적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화 이후 진보정당의 결성이 지체되면서 보수정당들이 진보적 유권자들을 선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이들이 이룩한 성과는 놀라운 것이다. 탈냉전기의 이념적 혼란 속에서 비록 아직까지는 유권자들이 만족할 만큼 명확한 사회개혁의 구상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진보정당은 진보의 가치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들이 만약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불평등 해소와 같은 진보의 가치요소를 내포한 이슈의 창출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진보정당의 성장은 결코 현재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진보진영이 남북한 사이의 긴장해소와 통일기반 조성을 명분으로 국가

사회주의에 불과한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이러한 시도를 방치함으로써 진보진영이 친북세력으로 오인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이한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 정파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차원에서 ‘경쟁의 룰’을 만들고 특정정파가 당내의 권력을 독점하기보다는 경쟁적 관계 속에서 민주적 책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문화를 성숙시켜야한다.

부록 1 진보정당사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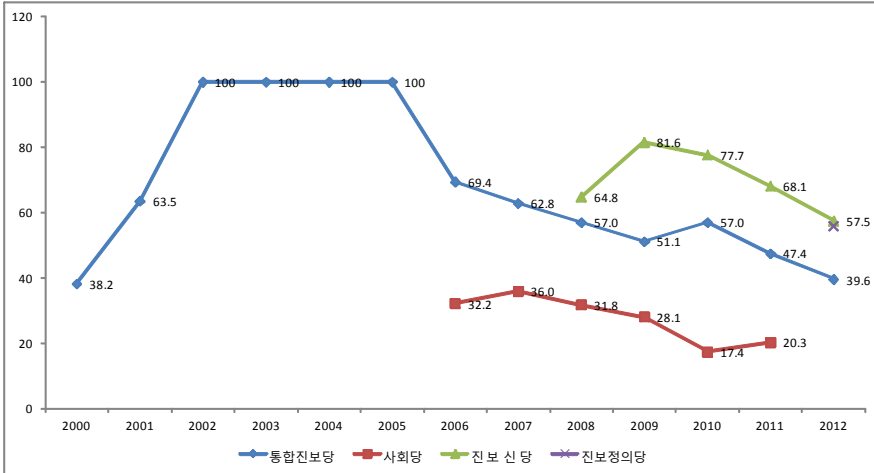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비고
1997년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 결성(10.26)	정치연대		16대 대선
1998년			청년진보당 창당 (11.29)	
1999년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결성(4.18)	노동자의 힘(준) 결성(8.8)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1.30)			16대 총선
2001년		노동자의 힘 출범 (10.13)	사회당 창당(8.26)	
2002년	권영길 대표체제(2기, 9.8)			
2003년	부유세 도입 서명운동			
2004년	김혜경 대표체제(3기, 6.5) 자주파 당권파 등장		‘반자본주의, 반조선로동당’	17대 총선
2005년	천영세 직무대행 체제(10) 권영길 비대위 체제(11)			
2006년	문성현 대표체제 (4기, 2.10)		희망사회당 창당(4.16) ; 한국사회당 창당(10.29)	
2007년				17대 대선
2008년	심상정 비대위 체제(1.12) 일심회관련 민노당원 제명안 부결(2.) 중복논쟁과 1차 분화 천영세 직무대행/비대위체제(2.4; 2.22)	진보신당 창당(3.16) 노회찬 · 심상정 공동대표체제	사회당 창당(11.30)	18대 총선
2009년	이정희 대표체제			
2010년		조승수 대표체제(10.)		
2011년	사회주의 조항 강령 삭제 통합진보당 창당 (12.11)	민주노동당과의 진보통합정당 부결(9.4); 노심조 탈당(10.6)	‘기본소득’ 강령 채택	

42 현대정치연구 | 2014년 봄호(제7권 제1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비고
2012년	부정경선 사건(2012.5) 이후 2차 분화와 민주노총 지지철회(8.14)	진보정의당 창당 (10.21)	사회당 해산(3.4)	19대 총선, 18대 대선
2013년		노동당 창당(7.21)		

자료출처: 조현연(2009)의 다수

부록 2 진보정당의 당비 납부율(%)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03~2012); 채진원(2009, 271)(2000-2002)

부록 3 진보정당의 당헌 및 강령 전문(발췌)

통합진보당(당헌)	정의당(당헌)	노동당(강령)
<p>정기당대회 개정 (2013.6.30)</p>	<p>창당대회 제정 (2012.10.21)</p>	<p>정기당대회 제정 (2013.6.23)</p>
<p>통합진보당은 <u>진보적 민주주의</u>의 기치 아래 <u>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생,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u> 통합진보당은 <u>노동자·농민·어민·도시빈민·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u>이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u>맘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며, 통합진보당은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u></p> <p>통합진보당은 <u>국민이 주인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사회</u>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과 정책을 가진 정책 정당이고, <u>노동자·농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 정당</u>이며, <u>지역 사회에 뿌리내려 진보적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생활 정당</u>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u>우리사회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u>이다.</p> <p>통합진보당은 <u>당원 주체의 당내 민주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u>할 것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u>당원의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당 운영 체제의 확립을 통해 진</u></p>	<p>정의당은 진보정치의 미래를 여는 <u>혁신적 진보정당</u>이다. 정의당은 현대적이며 민주적인 진보대표정당이 되기 위해 다음을 지향한다.</p> <p>정의당은 <u>노동기반 대중정당</u>이다. 조직된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u>노동계층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정당</u>이다. 일하는 국민 누구나 지지할 수 있고,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당이다.</p> <p>정의당은 <u>시민참여 진보정당</u>이다. 시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적인 정당이다. 리더십을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정당이다. 주권자인 시민은 누구나 정의당의 주인이 될 수 있다.</p> <p>정의당은 <u>현대적 생활정당</u>이다. 진보의 가치를 확장하고, 그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노선과 정책, 세력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u>현대적 진보정당</u>이다. 진보적 정책과 노선의 생산적 경쟁으로 국민을 삶을 바꾸는 생활정당이다.</p> <p>정의당은 <u>진보대표정당</u>을 지향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두고, <u>진보의 혁신에 동의하는 노동자·농민·빈민·시민·진영 및</u></p>	<p>....우리의 궁극 과제는 자본주의 극복 뿐이다....노동당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성별위계 구조와 생태 파괴 문명에 맞서 싸우며,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u>사회주의</u>를 추구한다. 우리의 궁극 목표는 <u>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통해 만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동체</u>이며, 이를 위해 <u>평등·생태·평화·연대의 가치</u>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 과제다.</p> <p>....국가기구에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킨 <u>국가사회주의</u>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닙니다. 복지국가라는 빛나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하는 자본의 힘을 제압하는 데 실패한 <u>사회민주주의의 한계 또한 극복 대상</u>이다.</p> <p>....우리는 철저히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주요 생산수단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u>사회적으로 소유·운영</u>한다....</p> <p>노동당은 대중정당, 운동정당, 생활정당으로 <u>진보정치의 새 문</u>을 연다....노동당은 <u>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u>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u>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u>이다.</p> <p>...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u>대중정당</u>이다....기성 정치 문화를 혁신하며 아래로부터 민중 권력을 건설하는 <u>운동정당</u>이다....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일상에서 <u>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생활정당</u>이다....우리는....생태 공화국을 건설한다....평화 공화국은 평화 체제 수립, 비핵지대와 등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 확산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며....새로운 민주적 정치체를 형성하</p>

통합진보당(당헌)	정의당(당헌)	노동당(강령)
정한 대중적 진보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지향을 담아 당헌을 제정한다.	개인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다. 통합적 진보정치 리더십을 실현하고, 진보 대 표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책임 정당이다.	는 방향에서 통일을 모색한다....

출처: 각 정당의 홈페이지(노동당의 경우 당헌전문이 없기에 강령 전문으로 대체)

부록 4 진보정당의 강령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제정일	2012.05.10. 전국운영위원회	2012.10.21 창당대회 제정 (불확실??)	2013년 6월 23일 정기당대회 제정
통일 관련 전문	<p>통합진보당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과 군사독재, 초국적 독점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파괴, 성차별 등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위기를 극복할 것이다.</p> <p>통합진보당은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 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p>	<p>적극적 평화·공영의 노력으로 평화체제를 실현하고,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강대국 중심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공영의 동아시아공동체, 나아가 진보적 세계질서를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이다.</p>	<p>분단은 한반도를 항구적 전쟁 위협에 빠뜨리며 자본주의에 맞설 대안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p> <p>우리는 분단에 따른 일상적 전쟁 위협을 넘어 평화 공화국을 건설한다. 평화 공화국</p> <p>은 평화 체제 수립, 비핵지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 확산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며, 근대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적 정치체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모색한다.</p>
주요 내용	<p>우리가 만들 세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를 위하여 2. 민생중심의 자주 자립 경제체제 실현을 위하여 3. 연대와 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4. 진정한 성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 5.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체제를 위해 6.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의 통일 체제를 향해 	<p>미래를 여는 7대 약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 민주주의 실현 2.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 3. 모든 사람이 행복한 복지·문화·교육 4. 여성의 지위 향상과 차별 없는 평등 사회 5. 농업 회생과 탈핵, 탈도건의 생태 사회 6. 평화·통일의 한반도, 평화·공영의 동아시아와 세계 7.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향한 근본적 정치개혁 	<p>노동당의 길</p> <p>1....연대와 협동의 대안 정치 공동체를 실현...2....국가 관료기구를 민중의 민주적 통제...3....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4....모든 인류가 공존하는 평화협력의 국제 연대...5....모든 시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6....새로운 탈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7....모든 시민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기본 권으로 보장...8....경쟁 대신 자아의 실현과 발전, 사회적</p>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p>연대를 위한 교육...9....긴강한 삶과 자기 계발을 위한 노동... 10...농업과 농촌을 희생...11...녹색 전환을...실현...모든 핵발전과 핵무기를 철폐...12...여성주의 가치와 관점을 구현... 13...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존중...14...다양한 이주민들에게 모든 권리를 선주민과 평등하게 보장...15. 장애인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철폐...16. 연령과 세대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배제...17...문화민주사회를 향해...18...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며, 보편적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19...과학기술과 지식이 자본과 권력의 것이 아닌 민중의 자산이 되도록 민주화하며 공유...</p>
<p>남북한 관련 조항</p>	<p>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의 통일 체제를 향해</p> <p>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p> <p>㉕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p>	<p>6. 평화·통일의 한반도, 평화·공영의 동아시아와 세계</p> <p>6-1. 평화는 통일의 기틀이고 통일은 평화의 완성이다. 6.15선언·10.4선언 이행 등 통일을 위한 상호 협력과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상호군축 등 평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함께 전개한다. 이를 통해 조기에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달성하고 통일의 기반을 닦는다.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진전과 연동해 종속적 한미동맹을 탈냉전적 관계로 재편하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p>	<p>3. 남북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남한과 북한의 양 체제를 모두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추구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p> <p>4. 호전적이고 국수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맞서 미국 등 강대국 중심 국제 질서를 극복하고 녹색평화의 교를 통해 모든 인류가 공존하는 평화협력의 국제 연대를 실현한다.</p> <p>11.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전환을 정치와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실현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핵발전과 핵</p>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p>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④7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 폐기하며 미중등 강대국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자주적 균형외교를 지향하며, 평화롭고 평등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p>	<p>수시킨다. 6-2.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해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한다. 미국·중국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평화·공영의 동아시아공동체를 건설하며 진보적 세계질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p>	<p>무기를 철폐한다.</p>

부록 5 친북세력에 대한 한국인의 정치적 관용

	이념성향	비관용(금지)	관용(허용)	전체	Pearson chi2(2)	
집회	진보(1~4)	149	149	298	29.38	
		50.0	50.0	100.0		Pr=0.000
	중도(5~6)	256	144	400	64.0	
		64.0	36.0	100.0		
	보수(7~10)	180	70	250	72.0	
72.0		28.0	100.0			
전체	585	363	948	61.7	38.3	100.0
선거참여	진보(1~4)	165	137	302	19.38	
		54.6	45.4	100.0		Pr=0.000
	중도(5~6)	263	140	403	65.3	
		65.3	34.7	100.0		
	보수(7~10)	179	68	247	72.5	
72.5		27.5	100.0			
전체	607	345	952	63.8	36.2	100.0
공직수임	진보(1~4)	159	140	299	27.07	
		53.2	46.8	100.0		Pr=0.000
	중도(5~6)	257	148	405	63.5	
		63.5	36.5	100.0		
	보수(7~10)	186	63	249	74.7	
74.7		25.3	100.0			
전체	602	351	953	63.2	36.8	100.0
단체결성	진보(1~4)	146	155	301	27.37	
		48.5	51.5	100.0		Pr=0.000
	중도(5~6)	234	163	397	58.9	
		58.9	41.1	100.0		
	보수(7~10)	177	74	251	70.5	
70.5		29.5	100.0			
전체	557	392	949	58.7	41.3	100.0

자료출처: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2010)

【참고문헌】

- 강원택. 2004.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 13집 2호, 143-165.
- 강원택. 2010. “지역주의는 약화되었을까: 지역주의와 2007년 대통령 선거.” 『한국 선거 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49-74. 서울: 나남.
- 강원택. 2013.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이념과 후보선택.”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77-99.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경제희 · 김재한. 1999.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전략적 투표자.” 『한국과 국제정치』 15권 1호, 65-95.
- 김윤철. 2004.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 논쟁.’” 『역사비평』 68호, 65-80.
- 김윤철. 2011. “민주노동당의 분당.” 『한국정당학회보』 10권 1호, 101-136.
- 김진수. 2004. “민주노동당의 성과, 색깔 그리고 파워.” 『신동아』 통권 537호, 226-245.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4/05/27/200405270500032/200405270500032_2.html. 접근일(02/07/2014)
- 김형철 · 박용수. 2010. “서울지역에서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요인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8권 1호, 159-195.
- 김회경. 2013.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통진당-민노당 강령 비교해 보니...” 한국일보(11월 7일).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11/h20131107034204210_00.htm. 접근일(02/07/2014)
- 박국희. 2011. “민주노동당도 강령서 ‘사회주의 삭제.’ 조선일보(6월 11일).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10611031411240>. 접근일(02/07/2014).
- 박원호. 201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책선호, 그리고 후보자 선택.”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분석』, 35-62. 박찬욱 · 강원택 편. 파주: 나남.
- 박종관. 2013. “PD 무력화시킨 NL ‘군자산 약속’ 뒤길래...” CBS노컷뉴스(9월 2일). <http://www.nocutnews.co.kr/news/1093320>. 접근일(02/07/2014)
- 박찬욱. 2013. “2012년 대통령선거의 특징.”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17-49. 파주: 나남.
- 안순철. 1996. “한국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행태.” 『한국정치학회보』 30집 2호, 165-186.
- 안순철 · 가상준. 2006. “17대 국회의원선거의 민주노동당투표자에 대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5권 2호, 37-57.
- 이갑윤 · 이현우. 2002.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

- 정치연구』 1권 1호, 137-166.
- 이내영. 2009. “한국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연구』 17권 2호, 42- 72.
- 전진영. 2007. “민주노동당의 제17대 국회 원내 입법활동 분석.” 『신아세아』 14권 2호, 184-207.
- 정성훈. 2002. 2002 한국 선거의 쟁점: 민주노동당의 약진과 사회당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 『정치비평』 9권, 61-84.
- 정영태. 2008. “4·9총선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두 개의 진보정당과 18대 총선 그리고 전망.” 『노동사회』 132호, 39-50.
- 조성대. 2000.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제3당후보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301-321.
- 조현연. 2004. “2004년 17대 총선과 민주노동당.” 『경제와 사회』 64호, 12-40.
- 조현연. 2009. 『한국진보정당운동사: 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 분당까지』. 서울: 후마니타스.
- 지병근. 2008. “한국에서의 전략적 투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약소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행태.” 『국제정치논총』 48집 2호, 151-171.
- 지병근. 2010.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현대정치연구』 3권 2호, 217-249.
- 지병근. 2013a. “한국인의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인식.” 『국가전략』 19권 1호, 31-56.
- 지병근. 2013b. “유권자들의 정책선호와 투표선택.”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181-200.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진보정당운동의 발자취. http://www.demos-archives.or.kr/research/document_party.php. 접근일(02/07/2014)
- 진영재. 1998. “대통령선거에서 부동표의 성격과 측정.”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2』, 151-195. 서울: 푸른길.
- 채진원. 2009. 민주노동당의 변화: 원내정당화 현상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27권 261-291.
- 채진원. 2010. “민주노동당의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87-117.
- 최정욱. 2006.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 개인의 선호도 변화 그리고 군소후보의 쇠퇴.” 『국제정치논총』 46집 4호, 223-240
- 최종숙. 2009. “민주노동당의 당내 민주주의 분석.” 『경제와 사회』 83호, 169-197.
- 최준영 · 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375-394.

- Jhee, Byong-Kuen. 2006. "Ideology and Voter Choice in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0(4): 61-83.
- Jhee, Byong-Kuen. 2011. "South-North Divide and Political Tolerance." *Korea Observer* 42(4): 677-698.
- 국회의원 현황. http://www.assembly.go.kr/renew10/mem/mem/mem_search.jsp. 접근일(02/06/2014).
- 노동당 강령. http://www.laborparty.kr/lp_platform. 접근일(02/02/2014).
- 노동운동의 발자취.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http://www.demos-archives.or.kr/research/document_workerMovement.php. 접근일(02/07/2014).
- 정의당 강령. <http://www.justice21.org/intro/info02.php>. 접근일(02/02/2014).
- 통합진보당 강령. <http://www.goupp.org/kor/intro/doctrine.php>. 접근일(02/02/20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201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1/2941.do?menuNo=200029>. 접근일(02/02/20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201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http://nec.go.kr/m/bbs/view/B0000341/2971.do?menuNo=400024&searchWrd=&searchCnd=&pageIndex=1>. 접근일(02/03/2014).

투고일: 2014.03.01. 심사일: 2014.04.03. 게재확정일: 2014.04.05.

【ABSTRACT】

Organization, Ideological Orientation, and Electoral Base of Progressive Parties in Korea

Jhee, Byong Kuen |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organizational and ideological features of progressive parties and their electoral base in Korea. Analyzing party constitutions and platforms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the Progressive Justice Party, and the Labor Party, it shows that those progressive parties have attempted to shift from the traditional labor union based socialist party. More importantly, this study shows that most progressive Koreans do not lik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at those who have little tolerance for the pro-North Korean activists are less likely to cast their votes for progressive par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claims that taking more critical approach toward North Korean government might help progressive parties to gain more electoral support from progressive voters.

Key Words | progressive parties, organization, ideology, North Korea, Unified Progressive Party, Progressive Justice Party, Labor Party